

# OECD ICT 편익 확대를 위한 정책과 시사점: ICCP/CIBE 공동 포럼을 중심으로

Policies for Seizing the Benefits of ICT for Business: Focused on Joint ICCP/CIBE Forum

강신원(S.W. Kang)

통신경영연구팀 선임연구원

본 포럼은 ICT의 편익과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 관련된 행사로서 포럼에서는 무엇보다도 ICT 이용확산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ICT 편익의 확대를 위해서는 ICT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콘텐츠 공급, ICT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마인드 변화, ICT 사용자를 위한 정보보호, 보안 등 신뢰환경 확보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본 포럼을 통해 ICT 편익 확대와 이용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ICT 투자가 요구되지만, 모든 ICT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특정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현재 ICT 편익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되고 있으나, 여러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ICT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등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벤치마킹 분석을 통하여 ICT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핵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ICT 편익의 확대가 강조되었다.

## I. 서론

2003년 10월 1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Jennifer Schenker(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주재로 개최된 OECD 비즈니스와 산업정책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의 목적은 OECD 비즈니스와 산업정책 포럼을 통하여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를 확산시키고 사용을 증가하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토론을 위한 것이다. 동 포럼 참석자들은 기업가(통신사업자 및 ICT를 이용하는 사업자), 학자, 통신서비스 이용자, 정부 관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30개국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본 포럼은 정보통신위원회(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ICCP)와 사업과 비즈니스 환경위원회(Committee on Indus-

try and Business Environment: CIBE)가 성장프로젝트 후속조치로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ICT 이슈에 대하여 공동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의 주요논의 이슈로는 1) ICT 공급과 수요촉진을 위한 정책 2) ICT 기술과 비즈니스 조직향상을 위한 정책 3) 효과적인 e-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4) ICT 사용자를 위한 신뢰환경 구축 정책 5) ICT/산업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2]. 포럼의 주요 결론으로는 ICT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ICT 관련분야의 투자 및 특정 분야에 선택적인 정책집중,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의 OECD 등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3].

본 고에서는 2003년 10월 1일 개최된 OECD 비즈니스와 산업정책포럼을 중심으로 ICT의 편익과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 관련된

주요논의 사항 및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 II. ICT 편익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

동 포럼에서는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 OECD 회원국, 주요 통신사업자 및 관련 주요 사업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총 17명의 발표자와 많은 회원국 대표들이 토론에 참석하여 자국의 입장을 개진하였다. 발표 및 논의는 포럼의 개최 목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의 확산과 이용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적 역할과 정책이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추진해나가야 할 부분,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부 및 민간의 협력, ICT 이용확대를 위한 산업정책, 신뢰환경을 위한 다양한 노력 등과 관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이해관계자의 토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세션별로 정리된 주요 논의 내용이다 [4]-[7].

### 1. ICT 공급과 수요촉진을 위한 정책

본 세션의 주요 논의 이슈로는 경쟁촉진과 ICT 공급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이니셔티브,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ICT 수요증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ICT 향상을 위한 수요와 공급정책의 조화 등이다.

발표자 Ewan Sutherland(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ser Group)는 경쟁과 자유화, 기술의 중립성, 규제의 투명성으로 인한 장점을 ICCP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인용하여 언급하였으며, 다양한 광대역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의 경쟁이 부족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규제가 유연하지 않아 새로운 기술과 기업체가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예는 여럿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쟁에 관한 법률조항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국면에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법개정의 속도가 느

려서 기술융합(convergence in technologies)과 같이 빠르게 변화함으로써 생기는 다양한 양상에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쟁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경쟁 업체를 진입하도록 하며, 대체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양산하는 정책이 질적 향상과 가격 하락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핵심임을 역설했다.

토론자 Dennis Weller(Verizon, United States)은 현재의 규제에 의한 문제에 대해 Ewan Sutherland가 제기한 문제점에 많은 부분 공감하였고, 서로 다른 기술이 서로 다른 규제 하에 있으므로 기술융합으로 인해 실제로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통신사업자인 Verizon의 예를 들면, Verizon은 기술과 시장에 관해 중립적이어야 하는 규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Verizon은 수익성이 큰 시장이지만 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흔한 일은 아니며, 예를 들어 통신 자유화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만, 종종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는 자유화(liberalization) 이후의 변화된 시장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야기되는 시장과 시장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지적하였다.

민원기(정보통신부)는 토론을 통하여 경쟁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광대역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기업의 출현으로 인한 경쟁이 저가의 광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한 예로 그러한 낮은 요금의 광대역 네트워크 망으로 지금 한국은 커다란 편익을 갖게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규제가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규제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것은 공급과 수요간에 선 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소비자들에게 세제 혜택(tax incentives)을 준다가나 ICT를 사는 경우 지원금을 줘서는 안되며, 수요는

다양한 ICT 기술의 발전에 의해 증진되고 정책은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들이 ICT 기술을 좀더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전체적으로 ICT 공급과 수요촉진을 위한 정책에 대한 관련 논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균형적인 규제가 요구된다. 많은 규제가 실업과 주요 기업들의 손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경쟁부족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편익 감소는 간과하고 있다. 둘째, 서로 다른 법률로 규제되는 ICT 기술 융합은 규제들간에 좀더 조화되고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2. ICT 기술과 비즈니스 조직향상을 위한 정책

본 세션의 주요 논의 이슈로는 비즈니스에서 요구되는 ICT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과 훈련정책, 비즈니스 섹터에서의 ICT 관련 기술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및 비즈니스 섹터에서의 조직변화와 새로운 ICT 관련 작업실습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다.

Andrew Watson(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nited Kingdom)은 ICT 기술 공급의 주요 부분은 민간 기업체와 연관이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 때문에 공급 메커니즘은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영국은 정부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소유를 창출하기 위해 ICT 훈련 모집기관과 교육업체들을 연계시키고 있다. ICT 훈련을 지속시키려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훈련체계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ICT로부터 기업체가 얻는 편익, 평생 교육으로 개인이 얻는 이득을 제시를 통하여 실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 ICT 훈련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좀 더 전이 가능한 ICT 기술교육 프로그램(IT passport)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영국정부는 ICT에 근거를 둔 조직적인 변화의 효과와 편익에 관한 사례연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을 기반으로 유연한 작업 동기를 증진시키고 있다.

한편 기술의 글로벌소싱(global sourcing of skills)과 사업과정(business processes)의 아웃소싱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숙련된 ICT 기술자의 이민과 기업활동의 해외 배치간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 정부의 문제 해결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Yoshihiko Sum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은 토론을 통하여 일본 기업체의 ICT의 편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일본기업의 약 80% 가량이 ICT 시행으로부터 미비한 ICT 일부분의 효과를 얻거나 전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내의 또는 기업간의 역할 구분으로 인하여 정보의 수평적인 이동, 조직체의 변화, 기술의 사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좀더 체계적으로 일본 정부는 ICT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기업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ICT 기술과 결합한다면 기업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생산해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그 필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e-정부(e-government)의 실행과도 결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GATS 하에서 서비스부문의 개방에 관해서 국내 서비스산업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쟁을 촉진할 필요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온라인상의 안정과 신뢰를 보장할 필요에 대한 논의를 했다.

토론자 Jonathan Menes(Department of Commerce, United States)는 ICT 기술을 수용하는 데 있어 정부의 장애와 정부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은 시행에 앞서 유의 깊게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경쟁에 있어 ICT 기술 융합의 영향을 논의했으며, 모든 OECD 국가들의 정부가 기존의 중소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생산성은 기업차원에서의 churning(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기존업체의 존재)에서 얻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기업내부(inter-firm)와 내부분야(inter-sectoral)의 구조조정은 노동력 시장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

여, 정부 차원의 실행이 필요한 부분은 기술 축적이며, 비즈니스 기술 공급(skill supply)과 함께 ICT 교육과 훈련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수준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이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밖의 정부의 조정(arrangement)도 비즈니스와 기술 공급자들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과 서비스 분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어떻게 가치사슬(value chain)이 조직되는가에 관한 기술의 효과는 좀 더 연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아웃소싱과 ICT 태스크를 강조했으며, 이것이 OECD 국가의 ICT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논의하고 있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이런 추세에 대한 중요 이슈로는 아웃소싱된 기술과 서비스의 질의 관리 강화, 중소기업의 참여, 주요 아웃소싱국가(예를 들면, 인도)들의 부가가치 형성 등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OECD에 주요 연구이슈이며, 훈련과 조직의 변화에 있어서 ICT에 기반한 조직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을 향상 발전시킴으로써 얻는 편익에 관한 사례연구를 제공할 필요를 강조하였으며, 또한 ICT 훈련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연하게 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에 좀더 반응이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 3. 효과적인 e-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본 세션의 주요 논의 이슈로는 디지털 콘텐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문(교육, 보건 등), e-정부 이니셔티브와 ICT 향상 및 e-정부 확대를 위한 효과 등이었다.

발표자 Claudia Loebbecke(University of Cologne, Germany)는 e-콘텐츠 생산은 단지 정책목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 성장, 생

산성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T 인프라와 콘텐츠에 대해 답과 계란에 비유를 했으며,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질적인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는 비즈니스가 형성되고 가치가 증가하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잡지와 신문, 멀티미디어 제품, 인터넷 서비스와 정보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와 정보 서비스간의 차별화 등의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디지털 콘텐츠는 또한 보건, 정부행정 서비스, 교육 등의 활동에 의해 생산되어 서비스를 확장시키고 서비스 공급의 단가를 줄이기도 한다. 디지털 콘텐츠에서 가치 창출은 무엇(신제품, 더 낮은 가격, 향상된 이용의 편이), 누구를 대상으로(공급자, 소비자, 시민?), 어떤 가격(누가 공급하는가, 누가 구입하는가)의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은 경쟁을 촉진시키고 인프라 공급, 대역폭(bandwidth), 보안 등에 있어 다양성을 장려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프라의 호환성을 강화하고 국가간(cross-border access) 기회를 증진하며, 공공 시장을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의 정책 시행 방법을 위한 재정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Rob Atkinson(Progressive Policy Institute, United States)는 토론을 통하여 급속한 광대역 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시장을 창출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는 몇 가지 옵션을 제시하였다. 먼저 거래(transaction)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없애고, 새로운 e-정부를 도입하고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직접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도 있다. 공공 텔레비전 방송이 역사적이고 교육적인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를 장려하고 보조하며, 국가 도서관이나 박물관 자료를 디지털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원격학습과 평생 교육, 원격 근무(teleworking) 등을 적절한 동기화를 부여하여 장려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영화와 음악을 복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ICT 사용을 증가시킬지도 모르나,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반경쟁과 경쟁정책은 사업자의 경쟁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인한 복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국 민간부문은 온라인 사용을 증가시키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이나 정부는 접속과 사용에 있어서 공평함을 유지하고 확산을 가속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tti Pietarinen(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Finland)는 토론을 통하여, 정부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역할이 있으며, 이는 e-정부를 제공하는 것과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정부는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하고, 광역화 서비스를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정부가 콘텐츠 리소스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 동기의 부여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한편 민간부문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체적 논의로는 가격 모델과 복제와 불법 복제를 줄이는 방법에 관해 논의되었다. 사업적 디지털 콘텐츠는 빈약한 형태로 적절하지 못한 가격으로 이용되어져 왔음이 인식되었고, 온라인 콘텐츠 공급을 위한 상업적 모델이 필요함이 논의되었다.

#### 4. ICT 사용자를 위한 신뢰환경 구축 정책

동 세션의 주요논의 이슈로는 온라인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소비자보호 등 정부의 정책, 온라인보안과 프라이버시 확대를 위한 관련 새로운 기술과 정부의 규제 및 소기업의 보안확보와 상거래상의 신뢰구축에 있어서의 문제 등이었다.

Chris Gavin(Oracle Corporation, United States)는 신뢰는 깨지기 쉬운 쌍방간의 현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상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문제는 중요하며, 한 나라 또는 한 분야에서 신뢰를 잃었을 때 그 나라 전체의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서점이나 항공사의 웹페이지가 마우스의

클릭 하나로 접근이 가능하기에 웹페이지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며, 즉, 웹페이지 상에서 신뢰가 깨지면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뢰가 깨진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Mr. Gavin은 정부 역할은 의식(awareness)을 일깨우며 안전을 보장하는 조직과 응용을 촉진시키며,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OECD privacy guidelines)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임을 설명했다. 한편, 규제가 따라 잡기에는 ICT 기술과 응용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에 규제의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다.

Martin Bond(Consumer and Competition Policy Directorate, United Kingdom)는 신뢰가 깨지기 쉬운 가능성에 대해 동의하며, 3가지의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첫째, 분쟁해결 메커니즘과 같은 자발적인 규제를 조장하는 것, 둘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의식 개혁 캠페인을 시도하는 것, 셋째, 기업체에서는 인기가 없으나 국가간 이슈(cross border issues) 같은 분야에서는 필요한 법적인 테두리를 마련해주는 것 등이다. 온라인상의 신용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이것은 단지 소비자와 기업간의 이슈만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보안뿐 아니라 스팸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업이 의식을 갖도록 일깨우는 것도 필요하며, 또한 국경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한편, 바이러스와 스팸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와 다른 인터넷 관련 문제들에 좀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5. ICT/산업정책

동 세션의 주요 논의 이슈로는 비즈니스에서 ICT 이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인프라정책, ICT와 산업정

책 사이의 응집력 증진, 비즈니스에서의 ICT 이익의 인식을 향상하기 위한 OECD의 분석 등이었다.

Bruno Lamborghini(Chair,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은 오늘날 우리는 혼돈과 커다란 기회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아직 적절한 비즈니스 환경이 없기에 ICT는 아직 우리에게 그 결실을 충분히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것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기업의 ICT 사용에 대해 이익을 주고 있는 사례 등에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점에서 ICT 실행의 원동력을 파악하는데 있어 벤치마킹의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더 좋은 아이디어와 성장의 효과를 얻기 위해 ICT 정책을 평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BIAC와 관련 ICCP 위원회 정책을 언급했으며, 광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Jorgen Rosted(Chair, CIBE)는 일관적인 ICT 정책은 1) 적절한 공급 환경, 2) 학교에서의 ICT, 3) 민간 콘텐츠, 4) e-정부, 5) 보안 등 5가지 구성요소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공급조건에 관해 정부는 통신을 분야별 특별한 규제로부터 일반적인 경쟁법률로 이동시켜야 하며, 민간 e-콘텐츠를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의 자유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이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온라인 보안에 관해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국가들이 공공/민간의 협력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e-정부를 발전시키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지만 효율적인 비용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한 이득은 매우 클 것이다. 정부는 민간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 경쟁과 공정성, 접근의 공평이 부족하기에 공공분야는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Hugo Parr(Chair, ICCP)는 ICT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2002 OECD 보고서를 언급했다. 그리고 배경 페이지(background paper)와 포럼의 4가지 주요논의 이슈는 일관성 있는 ICT 정책의 중요한 요소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 ICT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과 조직은 성공적인 적용 및 응용에 중요한 요소이다. e-콘텐츠 분야에 있어 좀더 분석이 필요하고 개선된 정책이 필요하다. 신뢰에 관한 의제를 진행시키고 온라인상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방법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보안과 조정이 필요하며, 디지털 세상에서 부를 창출해내는 매체는 변화하고 있으며 부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지적재산권의 역할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OECD와 정책입안자들에게 두 가지 노력(challenges)을 제시했다. 첫째, 정책에서 기술의 중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를 들어, 주파수 배분(spectrum allocation)은 여러 방법으로 여러 나라에서 다루어져 왔다. 또한 IP에 대한 의견들은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조정되어질 수 있다. 둘째, 인터넷 발전에 대한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는 문제와 온라인상에서 안전과 보안에 대한 민간부문의 희망사이에서 공동의 영역(common ground)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전반적으로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선순위의 과제들, 지적재산권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통신 인프라에 대한 규제와 달리 인터넷과 인터넷 정부는 중요한 측면이다. 보안과 프라이버시는 인터넷 사용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이 논의되었다.

### III. 정책관련 주요 이슈

#### 1. ICT 수요 · 공급 촉진정책 관련

우리나라는 토론을 통하여 ICT을 위한 정책을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공급측면에서는 경쟁이 가장 효과적인 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정책임을 언급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통신시장 자유화를 통한 경쟁의 편익을 경험한 바 있으며, 광대역 관련하여 한국의 하나로와 일본의 야후비비(Yahoo BB)의 예

는 정부가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시장실패가 존재할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쟁도입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정책수단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통신서비스에서는 망세분화, MVNO 도입 등)을 강조하였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서비스공급자에게는 인센티브지만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의 공개 사이에서의 균형이 요구됨을 언급하였다.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정부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하여 ICT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한적인 정책 옵션을 가지고 있다. WTO 체제 하에서는 ICT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으로 세금감면 정책이 있으나, 이러한 세금감면은 IT 정책에서만 사용되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사용되는 일반적 재정정책이다. 수요와 공급정책의 균형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요와 공급정책의 균형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선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2. e-콘텐츠 정책

통신사업자 그룹인 BIAAC은 광대역과 콘텐츠는 관련이 있어 투자 등 정책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며, 현재의 산업에서는 통신,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디지털 콘텐츠의 분석과 이에 따른 새로운 융합시대에 합당한 TV 등 통신기기의 공급,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e-메일은 전세계적으로 이용되는 핵심 애플리케이션이므로 디지털 콘텐츠 관련하여 이와 같은 핵심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스위스는 광대역 접속과 수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캐나다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에 있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입각해야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건, e-도서관 등은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을 것이며 동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 3. 신뢰구축 정책

프랑스는 스팸 메일이 많은 사회적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경우 스팸 메일을 보내는 사람에게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기로 했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유통 등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온라인 보안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4. ICT 산업정책

OECD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비 OECD 국가와 교류의 활성화, 콘텐츠의 공개와 무료제공의 필요성, 콘텐츠 공급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우선순위 결정 필요, IT 관련 표준화 등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 IV. 결론 및 시사점

본 포럼은 ICT의 편익과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 관련된 포럼으로 무엇보다도 ICT 이용확산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ICT 편익의 확대를 위하여 ICT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콘텐츠의 공급, ICT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마인드 변화, ICT 사용자를 위한 정보보호, 보안 등 신뢰환경 확보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ICT 편익 확대와 이용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ICT 투자가 요구되지만, 모든 ICT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특정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포럼에서 ICT 공급과 수요촉진을 위한 정책, ICT 기술과 비즈니스 조직향상을 위한 정책, 효과적인 e-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ICT 사용자를 위한 신뢰환경 구축 정책, ICT/산업정책 등의 이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정보통신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게도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재 ICT 편익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되고 있으나, 여러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ICT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등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벤치마킹 분석을 통하여 ICT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핵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ICT 편익의 확대가 요구된다. 즉, ICT 편익을 확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ICT의 기업, 산업 및 경제에 대한 효과와 ICT 정책평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는 기업의 ICT에 대한 마인드 변화와 정책의 집중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둘째, 소기업이 ICT 편익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집중이 요구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ICT 편익에 대한 마인드와 설비를 갖출 능력이 있지만, 소기업의 경우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운용인력이 없다. 따라서 소기업의 업무 및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켜 ICT 편익에서 소외된 기업에 대한 ICT를 확산시키고 편익에 동참시킨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ICT 정책이 소기업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포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ICT 공급과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과 이에 관련된 규제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현재 규제시스템은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융합상황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므로, 경쟁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요구되며, 이러한 정책은 ICT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다.

넷째, OECD의 정보통신서비스정책에 대한 연구는 회원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이므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가 필요하며, 이는 우리나라 위상과 한국기업의 기업이미지를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시켜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특히, ICT와 광대역 부문은 우리나라

가 앞서있으며, 선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부문으로서 OECD에서의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문이다. 한편, 현재 OECD 국가들은 ICT 및 광대역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나, 동 부문에 대한 이해, 역할, 향후 발생될 정책 이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동 부문의 우호적인 정책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많은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우리 IT 기업들의 기술 지향적 이미지를 높여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1] OECD, E-Business and SMEs, OECD(DSTI/IND/ICCP/PME/IE(2002)1/REV1), 2003. 5. 20.
- [2] OECD, Business and Industry Policy Forum: Policies for Seizing the Benefi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ICT) for Business, OECD(DSTI/IND/ICCP/AH/A(2003)1), 2003. 10. 1.
- [3] 강신원, 비즈니스와 산업정책 포럼 참가 보고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3. 10. 7.
- [4] OECD, Main Conclusions from the Joint ICCEP/CIBEF Forum on Policies for Seizing the Benefi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ICT) for Business, OECD, 2003. 10. 9.
- [5] OECD, Recent Development in the ICT Sector, OECD(DSTI/ICCP/IE(2002)17/REV1), 2003. 6. 5.
- [6] OECD, Contry Policy Reviews: "Promoting ICT Diffusion to Business," OECD(DSTI/ICCP/IE(2003)4), 2003. 6. 5.
- [7] OECD, Policy Benchmarks for Seizing the Benefits of ICT, OECD(DSTI/IND/ICCP(2003)3), 2003. 9. 29.